

포스트코로나 시대 접경지역 발전 전략

이병민*

Promoting Strategies for the Border Region in Post-COVID Era

Byung-min Lee*

요약: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특히 접경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외면 받아오던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한 접경지역의 경우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공간으로서 새로운 인식 및 개념화가 요구된다. 본 논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전망을 통해 자국우선주의,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기준 변화, 지역가치사슬의 변화, 4차산업혁명시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변화특성에 따라 SWOT 분석 등 상황별 발전방향을 분석, 제시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완충지역의 활용, 회복탄력성의 마련을 위한 비정치적 협력의 확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현실적인 접근을 제안하고,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의 영향과 대응전략을 마련해 보았다.

주요어: 포스트코로나 시대, 코로나바이러스, 접경지역, 남북관계, 발전전략, 시나리오

Abstract: The global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due to the Coronavirus outbreak, especially in areas that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such as border areas. In particular, In the post-COVID era, the border area between the two Koreas requires a new perception and conceptualization as a space for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coexistence. Through the status and outlook of post-COVID era, this paper analyzed the promoting directions of each situation, such as SWOT analysi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s such as domestic preference, changes into standards of new national competitiveness, changes into regional value chains, and the transition to digital econom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this paper proposed realistic approaches such as the utilization of buffer zones, expansion of non-political cooperation to prepare resilience, and promotion of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ed prepared strategies for analyzing the influ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cases and responding to them by writing possible scenarios.

Key Words : post-COVID era, Corona-virus, Border Region, Inter-Korean relations, Promoting Strategies, Scenarios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3043497).

*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Konkuk University, yurifin@konkuk.ac.kr)

1. 들어가는 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지리적 환경의 변화가 급변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관련된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어가면서, 지역의 경쟁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특히, 세계의 경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지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반(反) 세계화의 경향이 더욱 거세지고, 인적 이동 차단으로 ‘지역화’의 경향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을 낳고 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가치사슬의 연결망이 유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세계화에 대응하여 지역화 추세가 더 탄력을 받으면서, 인류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연대와 교역확대의 중요성도 동시에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화의 주요 현상인 자유무역을 지지되고, 인적 이동이 차단되면서 각국은 이미 지역화를 위한 다양한 시험을 하고 있다. 공급망의 지역화,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등으로 세계화 현상이 후퇴하고 있으며, 신뢰관계가 깨지면서 제한적인 교역과 협력, 권역단위의 발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재 속에서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으며, JP모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감안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40% 이상 줄어들고, 미국은 2분기에 경제가 14%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으며, OECD는 금번 위기로 '21년 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KISTEP, 2020).

이런 상황은 양면적인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위기가 커질수록 국가 간 협력과 연대가 중요해 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 현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둔화되면서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국경을 폐쇄하거나 교역을 중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많은 나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지리학적으로 이미 인식되어온 바와 같이, 글로벌 시장 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세계 경제공간의 불균등이 심화되어가는 현상과 연관이 매우 크다. 연결과 흐름, 배제와 장벽들은 이질적인 모빌리티라는 특성을 나타내며, 다양한 경험, 참여, 거버넌스, 정치적인 체계의 변화와 맞물려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폴콘브리지 외, 2019). 자본의 전 지구적 이동성과 세계화의 확대, 그리고 국경봉쇄 등의 원인에 따라 오히려 장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혁신과 사회적인 변화, 환경의 관계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혼종성과 상호 연결 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중국에는 커질 수도 있다. 로컬 단위의 경제활동이 결국에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세계화의 경향과 조화를 이루며 그 형태를 새로이 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현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나타날 것이며, 디지털경제에 기반을 둔 다양한 경제 활동이 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견하여 볼 때, 경제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리라는 예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지역, 특히 접경지역¹⁾과 같이 상대적으로 외면 받아오던 지역을 주변부뿐만 규정할 수는 없으며, 새로운 혁신의 출발점이자, 새로운 창의성 전파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강원연구원과 경기연구원 등 실제적으로 접경지역의 이해관계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강원도, 2017; 이정훈 외 2019), 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통일대비 균형개발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강민조, 2018).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2019년 변경계획 등 정부 차원의 관심도 매우 높은 편이다(행정안전부, 2011, 2019).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와 계획이 한반도의 거시적 정치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단위지역 토대 평화적 교류를 전제로 한 선언적 내용들이 많아,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김갑삼, 최민섭, 2019; 임을출, 2020). 나아가,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경제지리적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시나리오별 접근이 요구되는 바라 하겠다.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남북 접경지역의 경우는 “상이한 정치적 지배체제 하에서 서로를 구분하는 시대 혹은 산”으로 폐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화해와 협력, 공존을 위한 공간으로서 새로운 인식 및 개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박삼옥 외, 2005, p.24; 강민조 외, 2018).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지리학 관점을 가지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접경지역의 발전방향을 가정해보고, 가능한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현황과 전망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의 발생으로 인해 세계와 지역 경제, 산업발전의 환경은 매우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4차산업혁명의 기대감과 함께, 이러한 위기감의 출현은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다. 기존의 갈등 구조나, 국가 간의 이해관계보다는 인간 자체의 생존에 더 관심이 커지면서, 전쟁이 아닌 인간과 국가, 지역안보의 개념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살펴보면, 질병에 대한 노출과 인구 저항 등의 변수는 오랫동안 인적자원, 경제자원 등에 대해 글로벌 모빌리티의 다양한 특성을 양산해 왔으며, 그 자체가 주권적 권력과 공간의 통제력 확대라는 특징을 형성해왔다(폴콘브리지 외, 2019).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산업과 지역경제 관련된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현 상황의 전개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의 취약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동시에 기술발전의 적용을 조금 더 앞당기며, 제조공장/장비의 스마트화(인공지능화, 디지털화, 유연화, 학습 등)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함께 기술발전으로 인해 예견되었던 제조비용(재료비, 인건비, 제조비 등)의 지속적인 증가 및 생산인력 감소의 현상이 더욱 빨라지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인 봉쇄조치, 이동제한, 생산중단으로 국가 간 물류운송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경제 및 유통, 비중이 커져가고 있으며, 온라인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비대면 구매와 관련하여 위생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현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²⁾

1) 자국우선주의와 접경지역의 변화 가능성

국가 간의 경쟁 가운데,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대두되면서, 자국 우선주의 특성이 더 강화되고 다국적인 체계가 발전하리라고 예견해 볼 수 있다. 소위 ‘자국우선주의’ 전략을 통해 협력보다는 각국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게 되고, 한반도 접경지역과 남북간의 경제협력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각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접경지역에 관련된 각국의 이해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더 첨예한 갈등요소로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잘 알려진 대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이 충돌하는 경계의 지역이며, 현실적으로 여전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는 냉전 기류에 봉착해 있고,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주력제조업의 구조조정(적극적 개입)과 신산업육성(시장우선)과 혁신창업 전략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이후 자국의 이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주도해왔던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있는 한반도의 상황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깊은 내상을 입으면서 신 냉전으로 확대되는 미중 무역전쟁의 기로에 서있다. 이에, 민생·경제 등 내치에 더 집중하며,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가운데 한국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중이 각자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면 한반도와 다른 나라들 역시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 각국은 특정한 나라의 뒤를 따르거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해관계에 따라 헤쳐모일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재난은 언제

나 불평등하며, 사회적 취약성이 인위적인 혼란을 낳고, 식민주의, 제국주의, 신자유주의 등 이전의 불평등한 유산을 강화할 때가 많다(셀러, 2019).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구도의 변화와 함께 당분간 다극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분단체제의 공간 형성 논리가 이념적 토대인 ‘분단국가주의’로부터 출발하였고, 분단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남북 양국간의 적대성의 재생산이 DMZ와 접경지역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타자로부터 야기된 위기와 위협의 강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 ‘우리’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는 적대적인, 합착된 스케일의 정체성을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분단국가주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접경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발전방향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분단국가주의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기반으로 불신, 적대적인 우월성과 대결적인 배타성을 견지하는 태도를 통해 분단체제를 정당화하는 국가주의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존 앤더슨, 2013; 박민철, 2018). 이는 접경지역의 문제가 인접하고 있는 양국의 문제 뿐 아니라, 관련된 다지간의 관계망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 접경지역에서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공간정치가 변증법적으로 접합되는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가 ‘안보-경제 연계(security-economy nexus)’이며, 접경지역에서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가 분리되어 따로 작동하기 보다는 서로 깊이 결합되어 작동되는 개념임을 되새겨본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안보와 경제의 논리가 복잡하게 뒤섞여 펼쳐지는 상황을 예견해볼 수 있다(박배균·백일순, 2019).

한편으로는 각국이 경제적 독립을 생각하며, 강대국으로의 의존도를 더욱 낮추고자 하면서 자국 중심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기회를 엿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각국의 이익을 취하면서도 군사적 긴장감을 낮출 수 있는 협력의 가능성이 주어진다. 접경지역을 통해 자주적인 경제와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철(2013)은 DMZ를 대결과 분단의 개념에서 소통의 장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선(線)의 경계 개념을 초월한 공간으로서 초경계 지역협력, 더 나아가서는 단일한 초경계 지역협력보다는 중층적인 협력 공간을 통해서 DMZ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신냉전시대 이래로 접경지역은 중리와 한미일 간의 ‘완충지대’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도 위험이 큰 반면,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네트워크상의 전략적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자국우선주의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틈새시장으로서의 접경지역의 활용가능성을 꾀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핵심정책 중 한강 하구부터 DMZ를 가로지르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평화벨트 구상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접경지역 평화벨트 사업은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과 강원도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며, 생태 및 역사관광 잠재력도 풍부하고, 평화안보 관광도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임을출, 2018; 박은주, 2018).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망과 한국의 입장, 군사적 관계가 아닌 실질적 생존을 위한 경제협력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DMZ 인근의 접경지역에 남북공동시장을 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재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시대 오히려 통일경제특구 조성의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³⁾

2) 회복력 기반의 ‘선도국’ 도약

전통적인 국가경쟁력의 평가기준이 재정의 뒀에 따라, 지역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도 고민할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선진국(advanced

country)으로 분류되었던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 수준과 산업의 발달 정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 양적 지표에 따라 지역발전의 경쟁력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인가에 대한 회의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제3세계 국가들이 닥고자 했던 이른바 서양의 ‘선진국’들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실제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에서 벗어나 신흥국들이 시장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이상준, 2020).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 대응력과 사회 안전망 확보 등과 관련한 역량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요소로 떠올랐는데, 이는 경제지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오던 회복력의 요소가 지역발전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잘 알려진 대로 뉴노멀로 대표되는 저성장시대가 계속되면서 기술 혁신과 지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회복력(regional resilience) 및 사회 응집력 강화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하수정 등, 2014; Park, 2015; Martin *et al.*, 2016). 이때의 회복력은 단순히 외부 충격에 적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발전경로를 개척해 나아가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신동호, 2017). 이를 통해 살펴보자면, 선진국이라는 기존 틀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국가의 회복능력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며, 이러한 국가들을 소위 선도국(leading country)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감염병 등의 위기와 경제적인 불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 재난 극복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등이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고 국가를 평가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경제적 회복력을 갖추고, 극복 과정에서의 신뢰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최인수, 전대욱, 2020).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를 통제하는 측면에서 선진국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대응은 선진국 콤플렉스를 털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⁴⁾ 실제, 투명한 정보의 공개와 신뢰자산, 기술력, 글로벌 경제지형의 변화 등에 따라 산업발전과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한국의 경우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타난다.⁵⁾ 이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회복탄력성 제고의 기회로 접경지역의 발전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와 새로운 산업공간의 필요성

전 세계적인 봉쇄조치, 이동제한, 생산중단으로 인한 국가간 물동량 감소 등으로 인해 야기된 글로벌가치사슬(GVC)의 쇠퇴는 다양한 국제적 경제활동의 변화를 낳게 되는데, 소위, 지역가치사슬(RVC)으로의 방향 전환, 미국의 위상 약화, 약소국의 쇠퇴, 뉴노멀에 기초한 경제성장 저조,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의 축소 등 다양한 형태로 그 파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 서울연구원(2020)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로 생산 시스템이 약화되고, 중심에 있던 중국의 공급망 충격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기업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에 대해 재검토를 시작했고, 일본의 경우도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경제대책에서 해외공장의 국내 복귀지원 등을 통해 기업공급망의 중국의존도를 축소할 방침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선택적이기는 하지만, 상품과 지역, 국가 특성에 따라 리쇼어링 vs 글로벌가치사슬의 영향력과 효과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⁶⁾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가정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기업 유턴·국제 공급망 재편의 선택 기로에서 많은 기업들이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중국내 생산기지의 이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국제 공급망 재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리쇼어링(Reshoring), 혹은 ‘기업 유턴’이 주목받고 있는데,

3,000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뱅크오브아메리카 조사 결과, 12개 글로벌 부문의 80%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 하지만, 산업특성, 인건비와 운송비 절감 및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리쇼어링이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는 조사도 나타난다. 실제 중소기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리쇼어링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0%(16개사)로,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리쇼어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노동집약적 산업은 낮게 나타나며, 지역적으로는 인건비 등 비용 상승이 큰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리쇼어링 의향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현지 생산비용 상승(50.0%)’, ‘현지 생산 제품의 낮은 품질(37.5%)’, ‘Made in Korea’ 이미지 활용(31.3%)’ 등을 이유로 유턴 의향을 밝혔으나, 나머지 대다수의 기업들은 ‘국내 높은 생산비용(63.2%)’, ‘현지 내수시장 접근성(25.0%)’, ‘국내 각종 규제(9.9%)’ 등을 리쇼어링을 막는 요인으로 꼽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⁸⁾ 이는 다른 한편에서는 접경지역의 활용 가능성을 크게 하는 기회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KBIZ중소기업연구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으로 ①규제완화 ②인센티브 강화 ③리쇼어링 특구 조성 ④스마트화 연계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리쇼어링 특구를 지정하여, 유턴하는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안도 가능하기 때문이다.⁹⁾ 실제 접경지역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등에 있어서도 낙후지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높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의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의 증대를 통해 정치적 한계 지역을 새로운 경제공간으로 개발하는 주장이 많은 상황에서 보자면, 리쇼어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산업공간의 공급지로 활용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다(박삼욱 등, 2004). 이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접경지역에 입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산업 중심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참여시 기업부담금 경감 등의 지원 강화책을 마련하는 안이 더해진다면,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4) 비대면 수요 토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기회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5G 네트워크’ 기반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택근무 확대에 따라 원격 교육, 원격의료, 원격회의와 관련한 수요가 증대하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콘텐츠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개학 및 대학의 전면 온라인 강의가 현실화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5G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이를 활용한 비대면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 명확한데, 사람이 밀집한 지역을 피하려는 경향이 커지면서 비대면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네트워크가 발달할수록 기업의 성공여부도 빠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네트워크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기업이 내수 시장만으로 버티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 기존의 직업이 소멸하고,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는 등 직업구조 전환과 노동수요의 변화도 예견되는데, 디지털 전환과 산업 생태계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응력이 약한 업종이나 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저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업종의 경우 대응력 부족으로 일자리가 소멸될 수 있어, 기존의 개성공단과 같은 접경지역의 비대면기술 중심 산업적 활용이나 지역발전 측면에서도 접경지역을 디지털클러스터로 개발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늘어나다고 할 수 있다.

3. SWOT분석과 상황별 발전방향

포스트코로나 시대 접경지역의 발전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접경지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공간적 윤리를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어떻게 구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박민철, 2017). 실제 북한의 경우에도 경제분야 정면돌파의 주요 과제들이 경제사업체제와 질서 정도, 경제관리사업 개선, 인민경제 공업부문의 생산증대, 증산절약(노력, 에너지, 원가, 부지절약)과 질 제고 등으로 실질적인 과제에 집중해 있는 바,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접경지역의 활용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임을출, 2020). 이는 접경지역 교류협력 및 발전 구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접경지역 교류협력에서 남북한은 물론,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이해관계자들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과 지역발전 전략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접경지역과 주변지역 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갈등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며, 정치적인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사회와 남북한 간의 갈등문제까지 연계하여 상호간의 인식 공유 및 문제점의 경우 설득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접경지역의 재개념화를 통해 갈등과 대립, 군사와 정치 공간에서 화해와 교류, 상생, 경제기반의 일체성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입지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김정안 외, 2018).

지역발전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자면, 접경지역은 단계적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남북을 이어주는 ‘관문’과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남북 협력의 장(場)’이 될 수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지대’이자 ‘선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강민조 외, 2018).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관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경지역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하여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이는 그 당시 접경지역이 ‘정치·지리적 여건 및 지나친 규제 → 토지활용의 제약 → 정주여건 및 산업기반 취약 → 인구감소 및 고령화 → 소비감소 및 재정부담 증가 → 각종 사회간접자본 투자 미흡 → 접근성 취약 → 지역 간 교류 미흡 → 지역사정에 대한 무관심 증대 → 규제 지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행정안전부, 2011). 이에 실제,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에는 관련 계획의 수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지난 8년(2011~2018년) 동안 계획된 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나름 의미가 있다. 실제, 해당 기간 동안, 2.8조원을 투자하여 관광지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정부에서는 자평하고 있는데, 이를 확장하여,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두고 향후 방향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앞의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SWOT분석을 행하고 각 상황별 전략방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표 1 참조).

먼저, 상황 A에서의 공격전략(SO) 경우, 내부적 강점과 외부적 기회요인을 결합하여 발전방향을 도모하는 경우로, 지역 산업 발전의 지렛대(leverage) 역할 상황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에 기초하여 DMZ 등 접경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글로벌 시장보다는 내수시장을 토대로 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권역별 세부 전략의 구사가 가능할 것이다. 기존 인프라를 토대로 사업의 미비점 보완 및 핵심 산업과 관련된 미래형 기술개발, 지자체들의 연합 프로그램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진흥지구 관련 전략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이때, 완충지역으로서의 접경지역과 대도시 인접 가능성 등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광산업, 수자원 활용 등과 같은 분야를 토대로 비정치, 비군사적 산업 전략의 시행, 성과의 가시화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상황 B에서의 만회전략(WO)의 경우는 내부적 약점의 극복과 외부적 기회 활용을 통한 발전방향을 도모해 볼 수 있으나, 접경지역 자체가 갖는 지역적 요소가 제약요인(constraints)으로 작용할 때이다. 이때, 산업과 지역발전 관련 업체의 상대적인 미집적, 산업생태계 구조

표 1.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염두에 둔 접경지역의 SWOT 분석

내부 환경요인 분석		강점 (S)		약점 (W)	
		외부 환경요인 분석			
기 회 요 인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관련 미래형 콘텐츠 육성에 유리한 환경 • 금강산관광지대 협력 등 완충 지역 발전가능성 •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 수자원 협력 가능성 • 대중국 등 아시아 지역 대상 산업개발기지 	A		B	
		<p>강점 - 기회(SO) : 강점 극대화 및 기회 활용의 최적 전략</p>		<p>약점 - 기회(WO) : 약점 극복, 기회 활용 전략</p>	
위 협 요 인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비접촉 요구 증대 • 군사적, 정치적 긴장 가능성 • 다른 국가, 지역 산업진흥사업과의 경합 • 대규모 투자 형태의 앵커기업 입지 가능성 부족 	C		D	
		<p>강점 - 위협(ST) : 위협 요소 회피, 강점 발휘 전략</p>		<p>약점 - 위협(WT) : 가장 불리한 상황, 위협 회피, 약점 최소화 전략</p>	

로 보았을 때의 지원산업 취약, 지역내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의 약점을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둔 미래형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완하는 경우이다.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관련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발휘할 수도 있겠다(이상준, 2020). 이를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 활용 및 다양한 유형별 발전가능성, 기존 지자체 및 민-관 협력 등 거버넌스 구조의 재편 및 접경지역 산업발전을 통해 기대되는 비전의 홍보 등을 통해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인식 고조 및 투자의 발판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단계별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남한에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북한과 협력하는 형태의 추진이 필요하며, 궁극적인 가치사슬 구조를 포스트코로나 시대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구조를 완성하고, 각 개별 지자체별 맞춤형 전략 마련 및 실행

을 통해 다양한 파이프라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단계에는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산업집적지가 마련되면, 혁신지구 구축 등 통해 업계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마련, 장기적으로는 생산자 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강화해가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요구된다. 이때 남북협력 산업생태계의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인자들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기대하며 차근차근 전략을 마련해가는 것이 요구된다.

상황 ㉠에서의 우회전략(ST)은 위협요소의 극복, 강점 발휘의 상황으로 내부적 강점이 있지만, 외부 위협요인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쟁지역에 의해 내부 강점마저 붕괴될 수 있는 우려의 상황이다. 이때는, 타 지역, 타 국가들과의 경쟁 상황에 비추어 틈새시장 겨냥 접경지역의 차별화 및 발전전략을 꾀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등과의 역할분담 및 접경지역에서 현재 가장 잘 추진이 가능한 분야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접경지역의 협력 및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 등에 따라, 중기 및 장기

비전 및 전략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접경지역에서 잘 추진할 수 있는 차별적인 콘텐츠 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타 지역의 관련 분야 사업과의 협력적 보완관계 설정 전략을 마련하되, 남북한 인근지역과의 광역 발전계획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정책실행을 통해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의 원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스트코로나시대 언택트(untact) 관련 테스트베드로서 맞춤형기술개발 전략 및 남북의료복합관광 등 응용 및 특화 장기 전략을 펴고 이에 대한 핵심기업 유치 등 전략과 연계해 볼 수 있다. 이때 개성공단의 경우 시범단지 성격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AI 등 관련 콘텐츠를 통해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다(이상준, 2020). 또한, 관련 인근 집적지 조성의 경우,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앵커기업의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거버넌스 체제 개편 등을 통해 별도의 전문관리 조직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상황 ④에서의 생존전략(WT)은 위협요인 회피, 약점 최소화외의 상황으로 외부 위협요인에 의해 내부 약점이 드러나는 가장 불리한 상황이다. 지역 자체가 갖는 산업 지역의 한계, 관련 산업 업체의 미집적, 취약한 지원산업, 각 기관간 협력적 네트워크 부족, 외부지역과의 경쟁력 열세 등 내·외부의 객관적 상황을 모두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협력환경의 조성 및 기존 경협사업의 업그레이드, 산업의 인프라 재생 및 시행, 가능한 구체적 전략 모색과 함께 관광산업협력 등 가능한 전략을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의 인프라 및 사업의 확대(인력, 기술) 등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뿐 아니라, 전문기술과 인력, 상당한 자본이 소요되는 분야는 민간 부문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멀리 보고 육성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접경지역의 통일 한국 내 위상 달성 및 권역간, 국가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꾀하고, 가능한 구체적 전략을 단계별로 시행해가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타 지역과의 차별화와 상생적 협력사업 등을 동시 구사하고, 해외 관련, 연계 도시와의 유기적인 협력 등으로 인력, 자본 유치 및 유명기업 유치 지속 노력 등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해 앞부분 현황과 전망에서 거론된 주요 키워드들을 토대로 몇 가지 발전방향을 영역별로 제기해볼 수 있다.

첫째, 자국우선주의가 강조되는 국제상황속에서 산업협력과 관련된 완충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접경지역의 발전 방안은 다양하게 거론되어 왔지만 국내외 다양한 고려 사항이 많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능한 방향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접경지역 발전 구상의 경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접경지역의 발전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구축 및 사업들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기반조성기, 교류확대기, 교류정착기 등 3단계로 접근하되, 우선은 점경벨트를 중심으로 남북 산업교류협력 가시화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생태환경 보호, 군사시설의 보호 등 목적 때문에 접경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와 같이 개성공단 형식의 북측 노동력과 남측 자본의 결합 형태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까지 고려하여, 북한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강원도 접경지역 공단 등의 제안도 시도해볼 만하다. 실제 접경지역은 사회적 배제라는 특성이 고착화되어 특수한 맥락을 보유한 상대적 낙후지역이며, 소외지역이라는 측면에서 재래산업 중심 영세기업의 생산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이원호, 박삼욱, 2004; 이현주, 이승현,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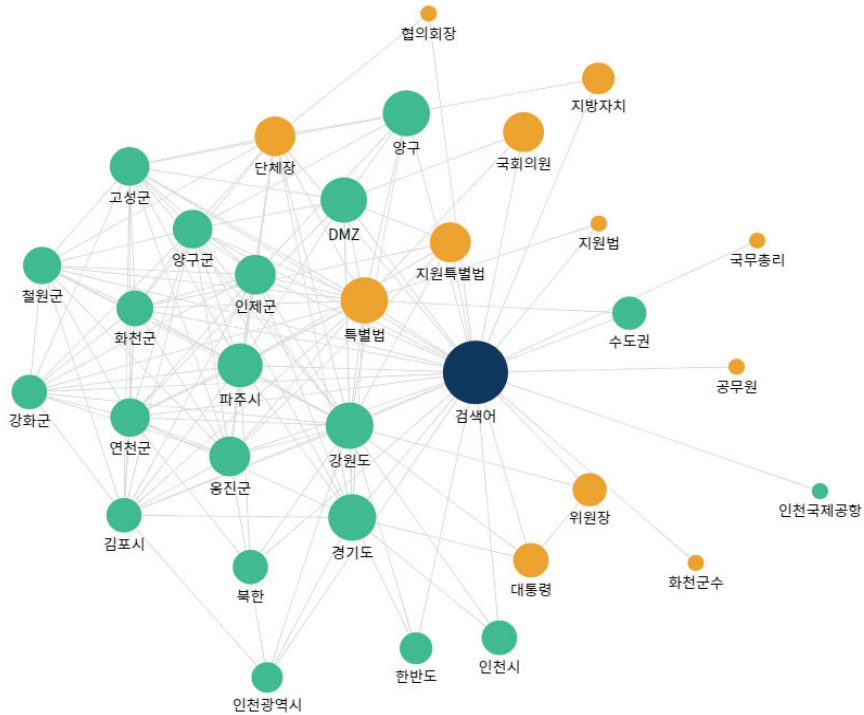


그림 1. 언론보도분석을 통한 '접경지역' 관련 관계도 분석

이때, 전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성공단의 운영을 재개하는 것이며, 이를 보완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¹¹⁾ 물론, 남북한 관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움은 남아 있다. 업종으로는 그린뉴딜을 지향하는 첨단산업, 부품산업, 물류, 에너지 특화발전지구, MICE산업, 서비스사이언스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대상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보고서 등에서 제기되어 온 통일경제특구의 조성 및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강원도, 2017; 강민조 외, 2018). 이전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제기해오던 계획들, 예를 들어 김포(남북교류협력단지), 파주(제2 개성공단 등 LCD 중심의 통일경제특구), 고양(평화통일경제특구), 연천군(DMZ 중심 남북 교류협력지구), 철원(평화산업단지), 고성군(북방교류산업단지) 조성 계획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조심스럽게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김택희 등, 2019). 남북협력 거점 구축을 위해 의정부, 동두

천, 파주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제안 또한 면밀히 검토, 시행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이정훈 외, 2019). 이전 2008년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한 점에 착안하여 재정 확보 및 지원법, 특별법 등 공동사안 뿐 아니라 실질적인 산업협력의 현실성을 도모할 필요도 크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접경 13개 지자체가 참가하는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같은 형식의 산업협력의 실질적인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 실제 언론보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의 경우, 고성군, 양구군 등 접경지역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관심을 보이고 언급되고 있으며, 키워드에서는 지원특별법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¹²⁾ (그림 1 참조). 이러한 상황은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지자체의 협력체계 마련과 공공, 민간의 협력강화를 통한 실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관광협력에 대해 실제 북한의 경우에도 2020년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로 관광산업을 지목한 바 있고, 삼지연 지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군 온천문화휴양지 등이 모두 개방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부상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지부진되면서, 남측과는 금강산지역 공동개발 성사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는 등 개별관광 등 중심으로 실제적인 협력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임음출, 2020). 이를 토대로 하면,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소위 ‘(가칭) 남북접경지역 지자체연합’을 통해 연대하고, 지자체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접경지역 교류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다. 기존연구에서는 남북한 긴장완화를 위해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Socio-ecological Resilience)에 초점을 맞추어, 회복탄력성 증진을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관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시대에도 사회적자본의 연계가능성을 높이자면, 양적인 관계보다는 질적인 신뢰, 관계에 대한 믿음, 협업기반의 원리에 근거하여, 소셜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이병민, 2013). 예를 들어 향후 과제와도 연결되지만, 남북 상호신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생태관광 등을 통한 환경보전과 커뮤니티의 공존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지나(2018)의 사례를 보면, 철원의 양지리철새마을 사례를 통해 커뮤니티 기반 관광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외부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이 유입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며, 회복탄력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우, 커뮤니티와 연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지역가치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지역자원 활용을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의 개방성 확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 구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지역 산업정책은 지역의 특성과 괴리된 첨단기술 중심의 편향된 산업선정과 고용 친화적인 지역특화산업의 지원 배제,

지역의 산업발전단계를 고려하지 않는 동일한 산업 전략으로 추진된 탓에 지역의 혁신 주체들이 적절한 파트너십을 구성하지 못하고 지역산업의 회복력이 약하며 응집력이 강하지 못하였다는 평가가 많다(남기범, 2016; 정준호, 2016). 이를 고려하여 신성장 산업으로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의 설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회복탄력성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정성을 살펴보자면, 프로젝트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전략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미·중 무역 갈등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예상되며, 예를 들어 공급망의 탈중국화가 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접경지역의 규제완화 가능성과 가성비 높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역가치사슬을 활용하여 신(新)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현 산업구조가 접경지역에서는 발전 가능성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는 산업구조를 발전시키거나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브랜드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제고가 현실적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비접촉 서비스 수요 지속 증가 등 소비자 행태 변화 및 디지털기술의 접합 등이 예견됨에 따라, 테스트베드로서의 접경지역의 효용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최근 산업지구의 특성이 이종업종간의 연관다양성을 피하고, 플랫폼 기반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허동숙·이병민, 2019).

예를 들어 직접적인 산업교류의 부담을 덜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의 변화를 통해 동북아의 교류협력을 심화·발전시키는 남북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내지 이러닝(e-learning) 기반의 교육 네트

워크를 통한 프로그램 공동운영 추진, 실무교육의 공유 등도 제안이 가능해 보인다. 또한, 인공지능, 블록체인 관련 신기술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복합 연구 산업단지 조성 등이 가능할 것이다.¹³⁾ 구체적으로 DMZ를 친환경 평화지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군사용이 아닌 산업용 로봇 클러스터구축, 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단지 건설 등도 제안해 볼 수 있다(김갑상, 최민섭, 2019).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호전될 경우, 남북공동 스마트시티 추진, 물류, 교통, 데이터, 비즈니스 서비스 등 핵심기능에 대한 공유개념을 기초로 북한의 IT 인력 활용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스마트화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실험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발전의 실제적인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고려하자면, IT와 문화협력 등 기존에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진행되거나, 거론되어오던 사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실질적인 해법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시행하는 것이다. 민간차원에서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국제기구와 연대해 자유로운 소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북한의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 민간 주도의 소프트 파워 교류 등 일반 시민과의 교류의 장을 확대 노력, 문화관광사업 협력 등을 다시 거론할 수 있다(KAIST, 2020). 특히, 학술교류 같은 교육목적 사업이나, 북한의 실질적인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문화관광 사업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개발을 도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데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추진하기 용이한 관광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생태관광, 교육, 의료, 금융 등)의 거점 개발 등이 가능한데, 이를 통해,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민간주체들의 참여를 최대한 견인해 평화의 혜택과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임을출,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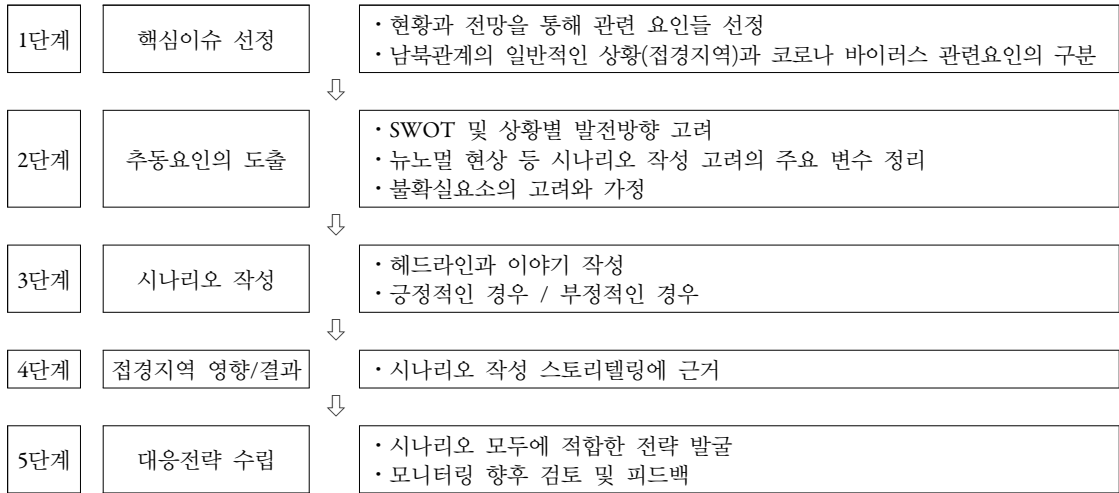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내국인 관광 수요 등을 살펴보자면, 남북 협력의 관광협력지구 조성, 금강산-설악산 연계관광 및 동해의 청정해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이전의 외국인 대상 관광수요를 국내

용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바이러스 종식 이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육성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리즘의 종식에 따른, 로컬리즘의 재부상, 지역중심과 분산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여행상품 개발, 소규모 대면여행과 고비용화 현상 등이 나타나며, 새로운 콘텐츠 개발 역량 및 경쟁력 요구, 지역관광의 시대를 여는 연대의 자세 유지(지역 재생 포함) 등을 통해 중국에는 버추얼 여행의 대중화, 초연결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관광의 새로운 전담과 구도를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제를 고민해보자면, 예를 들어 스마트관광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IoT Street, 5G, VR 콘텐츠, AI 기반형 안내체계 등 ICT 신(新)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스마트관광시티 조성 및 접경지역에서의 확대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강원도, 2017).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 특화산업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며 새로운 산업관광 콘텐츠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4.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접경지역 발전전략

하와이대학교 교수이자 세계미래학회 회장인 짐 데이토는 “절대미래(the future)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인간과 여러 가지 요인, 예를 들어 환경, 경제, 자원, 특히 기술 등의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전개되는 대안 미래들(alternative future)이 존재할 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시나리오 기법의 큰 장점은 ‘복수의 미래’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하고 선택을 그에게 맡김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김갑식, 2012). 이와 같이 포스트코

표 2. 단계별 시나리오 작성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접경지역 발전전략 도출 과정(안)



로나 시대 접경지역의 미래는 한 가지 ‘절대미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상정해 봐야 할 것이다. 이동성의 제한이라는 특징을 보자면, 비상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상상과 위험요소의 매트릭스, 시나리오 그리고 행위자들 및 과정의 복잡한 모빌리티를 시뮬레이션하고 시연해보는 것이 미래 예측을 위해 중요할 것이다(폴콜 브리지 외, 2019).

짐테이트 교수에 따르면, 시나리오는 현재와 같은 상황의 유지 발전, 현재 상황의 붕괴, 현재 형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난과 규율의 과정, 붕괴를 넘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단계로 도약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발생가능성과 중요성에 따른 시나리오 선정으로 임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미래에 중요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약점이라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미래상황의 몰락과 관련된 전문가 조사에서 접경지역과 관련하여 나타난 주요 키워드는 ‘경쟁력 상실’, ‘산업정체’, ‘안보’, ‘경제위기’, ‘북핵위협’, ‘생산구조의 낙후화’ 등이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KAIST, 2020).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

보더라도, 핵은 북한 생존 전략의 최우 보루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북핵문제가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은 매우 순진하고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앞에서 논의된 현황, 전망 검토 및 SWOT분석 및 상황별 분석을 통해 예상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단계별 과정을 정리해보았다(표 2). 시나리오 작성의 첫째 단계는 핵심 이슈(core issue)를 선정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황과 전망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접경지역 관련 이슈를 뽑아낸다. 그런데 이때, 남북문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견되는 상황을 구분하여 고려한다. 둘째 단계는 추동요인(driving force)을 찾아내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접경지역의 키워드를 함께 고려하며,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한 주요 요인들을 뽑아낸다. 예를 들어 북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없이 많다. 이때 변화의 동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불확실 요소이며, 시나리오 작성에서는 이를 토대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단계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다. 불확실 요소 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각각 헤드라인과 이야기를 만든다. 여기서는 긍정적 경우와 부정적 경우를 함께 상정하고 접경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표 3. 접경지역 관련 시나리오 작성과 대응전략(안)

핵심이슈	주요 변수 추동요인	시나리오 작성		대응전략(방향)
		긍정적인 경우	접경지역 영향/결과	
		부정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요인 ✓ 국가 중심주의 ✓ 선진국 판단 기준 / 척도 변화 ✓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 ✓ 비대면 산업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노멀 현상(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고착화 등) ✓ 완충지역의 필요성 증가 ✓ 국가·지역 단위 회복력의 요구 ✓ 리쇼어링 등 신산업발전 기회 ✓ 비정치적 신산업발전 기회(ICT, 문화 관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개발 및 산업의 점진적 회복 ✓ 국제적 협력관계 증가(완충지 활용 등) ✓ 바이러스 대유행 대응의 실패 ✓ 국제조정 역량 약화 ✓ 연구개발, 신약개발, 산업혁신 실패 ✓ 기업의 양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조체계 필요성 증가 / 다양한 협력 구조 마련 ✓ 접경지역 대상 단기적 미래형 협력사업 모색 및 시범사업 수행 ✓ 지역가치사슬 비중 증가 및 접경지역 관련 국제적 관심 증가 ✓ 비대면 산업 발전 / 기회요인의 접경지역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공조체계 마련 및 바이러스 대유행 현상 지속 대응 ✓ 완충지로서의 접경지역 인식 고취 및 공동 프로젝트 시행 ✓ 미래형 신산업-접경지역 적용 (테스트베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관련 요인(남북 일반적 상황) ✓ 미·중 협력 및 갈등 ✓ 한반도의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 ✓ 북핵 위협 및 북한의 변화 (내부변수 : 선군 대선정) ✓ 남·북 사유방식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국제적 구도(협력과 갈등) ✓ 북한의 내부변화 및 남북관계 변화 ✓ 국내 경제 상황 및 산업혁신 요구 증가 ✓ 4차산업혁명과 기술혁신,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러스 대응 성공과 산업발전 전략 마련 ✓ 산업의 회복력 증가 ✓ 특별법 제정 등 접경지역 지원 노력 ✓ 국가경쟁력 상실 ✓ 존재감 상실 및 희망 없는 사회의 삶 ✓ 양극화 심화 ✓ 노동계급화 하락 심화 등 ✓ 업계 부채 증가 및 경제적 소득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중요성 인식 증가 ✓ 신산업 중심 접경지역 활용 생산의 돌파구 모색 ✓ 안정 지향형 행위자 등장. ✓ 컨트롤타워 중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공동 대응 필요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합의와 산업·경제 공동협력 ✓ 국가브랜드 전략 제안 ✓ 접경지역 활용 위한 사회적 합의와 위험요소 관리(회복력 중심) ✓ 제약조건을 기회로 활용하는 지렛대 전략 방안 발굴 ✓ 접경지역 발전위한 다양한 협의체 등 거버넌스 구축

예측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핵심이슈의 선정, 관련 이슈의 도출, 시나리오 작성, 대응전략의 수립, 모니터링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넷째 단계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시나리오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합한 전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통제하고 계획 가능한 것, 즉 전략대안의 범위를 설정하여 각각의 적합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접경지역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의 시나리오를 비교, 상정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발전의 방향설정이라는 차원에서 경제와 산업요소를 주로 고려하였다. 성공적인 경우에는 감염 위험성이 잔존하며 대

면 산업의 더딘 회복 등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인 측면과 신산업 중심 수요의 증가와 완충지역의 기회 활용 등으로 공동프로젝트 등이 결실을 맺을 경우 점진적인 회복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경우에는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혼란, 불신의 증가, 가족 중심 소수 공동체 역할 강조, 대면 접촉 기반 제조업 등 산업의 세계적 위축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의 급격 증가를 상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조업 및 기간산업의 경우에도 성장 여력이 있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 서, 업계의 사정은 더욱 안 좋아질 우려가 크다. 이때, 관련 산업의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접경지역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경제와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과 맞물리면서, 산업의 구조전환 및 경쟁력의 지표는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접경지역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이때, 어떻게 변화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지역의 다양한 협력 거버넌스와 국가간 협력체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접경지역의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5. 나오는 글

본 논문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현재 상황과 전망의 다양한 예측을 통해 관련 이슈들을 뽑아보고, 상황별 분석에 따라 발전 방향을 상정해보려는 시론적인 연구이다. 접경지역과 관련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상징하고, 동향과 전망의 특성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내용은 지구 우선주의 상황 변화에 따른 완충지로서의 접경지역의 기회 증가, 전통적 국가경쟁력 기준의 변화와 회복력의 중요성 증가에 따른 상생구조의 마련 필요성 강조,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에 따른 지역가치사슬의 강조와 리쇼어링 기회 등을 활용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기획, 특별법 등 지원의 필요성 증가와 함께 비대면서비스 수요 급증과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비정치적인 부문의 협력 우선 등이다. 이를 위해 SWOT 분석 등도 시행하여, 공격, 만회, 우회, 생존전략 등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핵심이슈의 선정, 추동요소의 발굴, 시나리오의 작성과 대응전략의 수립 등을 제안해 보았다.

이때, 분석에 따라, 완충지역의 활용, 회복탄력성의 마련을 위한 비정치적 협력의 확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현실적인 접근을 제안하고, 시나리오 작성을 통해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의 영향과 대응전략을 마련해 보았다. 이제까지 접경지역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거시적인 정치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거나, 단위지역 토대 평화적 교류협력 등 선언적 내용들이 많

아, 포스트코로나 시대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지리학적 관점을 가지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접경지역의 발전방향을 가정해보고, 가능한 전략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시론적인 차원의 논문으로 앞으로 많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럼에도 접경지역이라는 경제지리학적 대상에 대해 미래지향적 시나리오를 접목하여 함의점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한다.

정리한 바와 같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할 수 있다. 실제 2010년 이래 IT기술의 변화는 포스트코로나와 관련된 미래적인 관점에서 ‘스마트화’, ‘모바일화’, ‘공유화’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강대국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고, 접경지역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KAIST, 2020). 이러한 상황은 제약을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소위 지렛대 전략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는 언택트(untact) 환경에 맞추어 규모의 경제와 관련된 세계수요를 고려하여 콘텐츠산업, ICT산업 및 생명, 의료, 미래형 산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정치영역의 협력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위 포스트코로나시대 접경지역에 대한 성공적인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와 함께, 사회, 문화, 경제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환경의 불안정한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며, 디지털환경의 변화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 시점이 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적인 환경변화와 내부적인 자산과 실제적인 운용가능성, 북한과 주변 국가들의 메시지를 얼마나 잘 읽어내는가, 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기술변화와 결합된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하고 개발하고, 공급하여 원활한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성공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수요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지원 정책의 적극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

- 1) 일반적으로 접경지역은 국가 간의 영토적 경계가 되는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권국가의 공간적 관할권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범위로서 국가 간 영토나 공해를 가르는 경계선에 접한 지역을 의미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이 접하고 있는 한반도의 남북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실제적으로 군사분계선에 맞닿아 있는 한국과 북한의 지역을 의미하며, 비무장지대(DMZ)와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구분된다. 관련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민간인 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시·군,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 등을 포함한다(박은주, 2018).
- 2)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19가지 '뉴 트렌드'... (문화일보, 2020.5.4)를 참조하여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였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0401031442000001>
- 3)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사, 청와대 보도자료 (2018. 8. 15).
- 4) 이와 관련하여 해외문화홍보원이 발간한 '해외언론이 본 한국 코로나19 방역 100일' (2020. 5. 8)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방역(K-방역)이 매우 성공적이며, 선진형 모델로서의 의미가 매우 큼을 강조하고 있다. 개방성, 투명성, 시민의식의 결합에 따라 국가이미지를 제고했으며, 중견국 리더십의 발휘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 5) "코로나 이후 한국은 '첨단제품 세계공장'이 된다" (중앙일보, 2020. 4. 20) 장 폴 로드리그 美 호프스트라대 교수 (경제지리학) 인터뷰, <https://news.joins.com/article/23758189>
- 6) 한편에서는 단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이 차단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측면과 뉴노멀시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측면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회귀이유, 상황적 배경, 산업특성, 기업성격, 효과적 유인정책과 사례, 사후평가 등에 대해 명확한 이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해외공급망의 변화와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면서 코로나 위기로 부상한 우리의 시장을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공급처로 육성하는 등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류주한, 2020).
- 7) Korea urged to promote manufacturing reshoring, (Korea Times, 2020. 5. 7일자 기사) https://www.koreatimes.co.kr/www/biz/2020/05/488_289105.html

- 8) 중소기업중앙회, 2020. 6, 중소기업 '리쇼어링' 관련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 9) KBI중소기업연구소, 2020. 6,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연구.
- 1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 2.8),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 및 사업 추진.
- 11) 북한 쪽 접경지역 인근인 개성공단은 LH가 사업시행자로서 2007년에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나 2016년 2월 이래 현재까지 폐쇄된 상태이다.
- 1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발표된 2011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BIG KINDS 시스템(<http://www.kinds.or.kr>)을 통해 언론보도 자료에 대해 '접경지역'을 키워드를 대입하여 관계도를 분석한 경우 1위는 '강원도'(장소, 가중치 31), 2위는 '특별법'(키워드, 가중치 29)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며, '접경지역'에 대한 연관 키워드 분석 결과, 1위는 '군수협의회'(가중치 17.52, 키워드 빈도수 74), 2위는 '강원도'(가중치 14.88, 키워드 빈도수 70)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2020. 8.21일 기준).
- 13) 실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 등 산업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스마트산단을 통한 제조업의 혁신, 융복합화, 첨단산업시설, 신산업 유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성공사례로서 접경 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일자리위원회 등, 2019).

참고문헌

- 강민조 외, 2018,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 I, 국토연구원.
- 강원도, 2017, 강원비전 2040.
- 관계부처 합동, 2020,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 (2020. 7. 14).
- 김갑삼·최민섭, 2019, “통일대비 남북 접경지역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지 17(1), pp.285-304.
- 김갑식, 2012,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북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 현대북한연구 15(1), pp.124-156.
- 김정완·박영민·정재운, 2018, “접경지역 남북 교류거점의 입지와 개발방향,” 평화학연구 19(4), pp.99-120.
- 김지나, 2018, “사회생태적 회복탄력성의 관점을 통해 본 DMZ 접경지역의 커뮤니티 기반 관광,” 국토연구, pp.113-133, 국토연구원.
- 김택희·박용식·최충익, 2019,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 강원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2019.10), pp.572-594.
- 류주환, 2020, “리쇼어링은 탈출구가 아닌 ‘재편모델’ 유연하게 ‘넥스트 쇼어링’을 준비하자,” 동아비즈니스리뷰 303호 (2020년 8월 Issue 2).
- 박민철, 2017, “분단체제의 공간성: DMZ와 접경지역의 로컬리티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28(3), pp.123-160.
- 박배균·백일순, 2019, “한반도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안보-경제 연계와 영토화와 탈영토화의 지경-지경학,” 대한지리학회지 54(2), pp.199-228.
- 박삼옥·이원호·이현주·김상빈·정은진, 2005, 사회경제공간으로서 접경지역: 소외성과 낙후성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삼옥·이현주·구양미, 2004, “접경지역 기업의 연계 및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2), pp.227-244.
- 박은주, 2018,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언,” 한국동북아논총 23(4), pp.49-64.
- 박정수,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서비스 모델과 정책과제,”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이슈 제83호.
- 서울연구원,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전략, 포스트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제안 토론회 (2020. 5. 12).
- 신동호, 2017, “경로의존론과 지역회복력 개념: 지역격차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0(1), pp.70-83.
- 이병민, 2013, “소셜 네트워크 리소스(Social Network Resource)의 적용과 활용 - 공간적 의미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6(1), pp.50-70.
- 이상준, 2020, 뉴노멀과 남북접경지역의 과제, 제5회 접경지역포럼 발표 자료(2020. 8. 8).
- 이영민·이종희 역, 2013, 문화·장소·흔적, 한울아카데미. (= Anderson, J., 2017, *Understanding Cultural Geography: Places and Traces*, 1st edition, Routledge).
- 이원호·박삼옥, 2004,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이해-소외성의 형성과 변화,”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2), pp. 171-201.
- 이정철, 2013, DMZ 담론(2013): 개념사와 새 패러다임의 모색, 춘천: 강원발전연구원.
- 이정훈 외, 2019,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전략, 경기연구원.
- 이현주·이승현, 2004, “경기도 접경지역의 경제구조변화와 기업의 입지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2), pp.203-225.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9, 일자리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2019.11.19).
- 임을출, 2018,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DMZ·접경지역 평화벨트 조성 방안,” 접경지역통일연구 2(2), pp.9-31.
- 임을출, 2020, 북한의 2020 정면돌파전략과 접경지역에서의 남북협력 전망, 제3회 접경지역포럼 발표 자료 (2020. 2. 15).
- 임현·한종민·정민진, 2009, 미래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분석 및 시스템 구축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슈페이퍼 2009-09.
- 중소기업연구소, 2020. 6.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중소기업의 리쇼어링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소기업중앙회, 2020. 6. 중소기업 ‘리쇼어링’ 관련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 지상현·이승욱·박배균, 2019, “한반도 경제와 접경지역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 접근의 함의,” 공간과 사회 29(1), pp.206-234.
- 최영석 역, 2019, 모빌리티 정의, 엘피 모빌리티 인문학 총서9,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 (= Sheller, M., 2018, *Mobility Justice The Politics of Movement in an Age of Extremes*, Verso).
- 최인수·전대욱, 2020, “코로나 19 위기극복과 사회경제적 회복력(Resilience)의 측면에서 본 신뢰문제,”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1-15.
- 하수정·남기찬·민성희·전성제·박종순, 20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연구, 국토연구원.
- 하홍규 역, 2019, 모바일 장의 발자취: 모빌리티 연구 10년, 엘피 모빌리티 인문학 총서 6,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 (= Faulconbridge, J. and Hui, A., 2017, *Traces of a Mobile Field: Ten Years of Mobilities Research*, 1st Edition, Routledge).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20,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미래전망 및 유망기술, KISTEP 미래예측 브리프(2020-01).

해외문화홍보원, 2020, 해외언론이 본 한국 코로나19 방역 100일 (2020. 4. 3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 및 사업 추진 (2019. 2.8).

행정안전부, 201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 육성 (2011.7.27.).

허동숙·이병민, 2019, “산업과 문화의 협력: 스마트 전문화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 전략 모색,” 국토지리학회지 53(1), pp.101-117.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2020, 2030 카이스트 미래경고, 김영사.

Martin, R., Sunley, P., Gardiner, B. and Tyler, P., 2016, “How regions react to recessions: resilience and the role of economic structure,” *Regional Studies* 50(4), pp.561-585.

Park, S. O., 2015, *Dynamics of Economic Spaces in the Global Knowledge-based Economy: Theory and East Asian Cases*, London: Routledge.

[인터넷 자료]

“코로나 이후 한국은 ‘첨단제품 세계공장’이 된다” (중앙일보, 2020. 4. 20). <https://news.joins.com/article/237>

58189(최종열람일: 2020년 8월 25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19가지 ‘뉴 트렌드’... (문화일보, 2020. 5.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0401031442000001>(최종열람일: 2020년 8월 25일).

Korea urged to promote manufacturing reshoring, (Korea Times, 2020. 5. 7).https://www.koreatimes.co.kr/www/biz/2020/05/488_289105.html(최종열람일: 2020년 8월 25일).

교신: 이병민, 05029,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문화콘텐츠학과, 전화: 02-450-3919, 이메일:
yurifin@konkuk.ac.kr

Correspondence: Lee, Byung-min,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 Contents,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29, Korea, Tel: +82-2-450-3919,
E-mail: yurifin@konkuk.ac.kr

최초투고일 2020년 08월 17일
수정일 2020년 09월 04일
최종접수일 2020년 09월 11일